

글로벌 방위산업 정책 변화와 한국 방위산업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Global Defense Industry Policy and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 Strategy

양현상*¹⁾

Yang Hyeon Sang*¹⁾

[초 록]

본 논문은 급변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과 주요국의 방위산업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첨단 기술의 방산 분야 접목으로 글로벌 방위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및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조하고 무역안보규제를 강화하며, 유럽연합(EU)은 유럽 방위산업전략(EDIS)을 통해 역내 조달 비중 확대와 공동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10위권에 진입하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정세와 대외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신뢰 기반 협력 확대, 기술보호 법제 강화, 금융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apidly changing global defense industry environment and changes in defense industry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to derive strategic implications for promoting exports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Recently, global defense spending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geopolitical risks and the incorporation of cutting-edge technologies into the defense industry, and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strengthening their own-centered supply chains and expanding cooperation with their all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is emphasizing supply chain resilience and strengthening trade security regulations through the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NDIS), and the European Union (EU) is aiming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intra-regional procurement and joint procurement through the 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 (EDIS). Korea is showing growth potential based on its technological prowess and price competitiveness, entering the top 10 in the global arms market share, but policy support is urgently needed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external environ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such as establishing an integrated control tower, expanding trust-based cooperation, strengthening technology protection legislation, and expanding financial support.

Key Words : 방위산업, 방산 수출, 글로벌 방위시장, 방위산업 정책, 한국 방위산업, 지정학적 리스크, 첨단기술, 공급망, 금융지원, 기술보호
Defense industry, defense exports, global defense market, defense industry policy, Korean defense industry, geopolitical risk, advanced technology, supply chain, financial support, technology protection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글로벌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방위비 지출은 2조 7,1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5년 대비 37%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4%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1) 국방융합기술연구소/연구소장
(Defense Convergence Technology
Institute/Directo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yhs10386@naver.com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Received : July 5, 2025 Revised : September 29, 2025

Accepted : September 30, 2025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주,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방위비 지출의 급증은 세계 각지에서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력 충돌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의 러시아 및 중국 견제 전략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며 주변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동반 증가시키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대되며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드론, 우주, 로봇, MRO(유지·보수·운영) 등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의 전력 현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한 것은 신기술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10위(2.2%)를 기록하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에는 폴란드, 호주, 영국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 힘입어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방위산업 정책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시장 확장성을 제한하는 주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역내 조달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최신 동향과 주요국(미국, 유럽연합)의 방위산업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협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 촉진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24년 글로벌 방위비 지출 추세 및 주요국의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현황과 당면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기술보호, 금융지원, 국제 협력 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탐색하여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 및 시장 확대를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주요국(미국, 유럽연합)의 방위산업 정책을 상세히 고찰한다. IV장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당면 과제를 진단한 후, V장에서 한국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학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논하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 및 시장 확대

1. 세계 방위비 지출 추세 및 주요국 현황

글로벌 방위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대비 37%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증가는 미주,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모든 주요 권역에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단위: 10억 달러, 2020년 불변가격)

연도	지출액
1988	1,700
.....
2015	1,984
.....
2024	2,718

[표 1. 글로벌 방위비 지출 추세(1988~2024)]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수십 년간의 방위비 지출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면 현재의 급증세가 역사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의 가파른 상승 곡선은 현재의 시장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단위: 10억 달러, %)

권역	지출액	권역비중	전년비 증감률
세계	2,718	100	9.4
미주	1,100	40	5.8
유럽	693	26	17
아시아 및 대양주	629	23	6.3
중동	243	9	15
아프리카	52	1.9	3

[표 2. 권역별 방위비 지출액(2024)]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표 2는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권역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지구적 현상임을 뒷받침한다.

2024년 국가별 방위비 지출을 살펴보면, 미국이 9,97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3,140억 달러), 러시아(1,49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NATO 32개 회원국의 지출은 총 1조 5,060억 달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방위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했으며, 중국은 2035년까지 국방 분야 현대화 목표에 따라 지난 10년간 59% 증가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방위비 지출이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을 넘어 국가 안보 태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기술 혁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국가 예산의 구조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안정과 기술 군비 경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며, 방위 시장의 확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임을 보여준다.

(단위: 10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지출액	국가 비중	GDP 대비	전년대비 증감률	10년 증감률
-	세계	2,718	100	2.5	9.4	37
1	미국	997	37	3.4	5.7	5.8
2	중국	314	12	1.7	7	19
3	러시아	149	5.5		38	100
.....
11	한국	47.6	1.8	2.6	1.4	30

[표 3. 주요 국가별 방위비 지출액 및 변동률(2024)]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표 3은 주요 강대국 및 분쟁 당사국들의 방위비 지출 규모와 증가율을 명확히 제시하여, 글로벌 방위 시장의 주요 동인과 수요처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높은 증가율은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주변국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를 시사한다.

2.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및 신기술 도입의 영향

세계 각지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과 무력 충돌 확산은 방위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는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견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로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주변국의 지출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대되는 등 정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미국-이스라엘과의 갈등 지속 및 후티 반군 지원 등으로 방위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은 방위산업에서 전력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에 따른 신산업 분야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기술의 발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주, 로봇, MRO(유지·보수·운영) 등의 분야 또한 향후 방위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긴장과 신기술 도입은 단순히 방위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개별적인 요인이 아니라, 상호 강화 효과를 통해 방위산업 시장의 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은 드론과 같은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며 군비 경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전통적인 군비 경쟁을 넘어선 '기술 군비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첨단 방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를 보장한다.

한국 방위산업은 현재 전통적인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러한 시장의 질적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기존 무기체계에서 이미 입증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력 현대화 추세는 전통적인 플랫폼에도 AI, 사이버, 드론 기술과의 통합을 요구하므로, 한국은 기존의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기술을 기존 제품 라인에 통합하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시장 점유율과 공급망 강점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III. 주요국의 방위산업 정책 분석

1. 미국

1.1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방위산업전략(NDIS)

미국 방위산업은 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교란이나 지정학적 긴장 상황 시 주요 군수물자의 안정적 수급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향후 3~5년간의 산업기반 정책 수립과 투자 방향을 담은 '방위산업전략(NDIS:National Defense Industry Strategy)'을 2024년 1월 발표했다. NDIS는 ①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②전문인력 양성, ③유연한 획득 체계 구축, ④경제적 역제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인도·태평양 역지력 강화, 동맹·파트너와의 협력 확대, 대응역량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재권 및 데이터 분석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NDIS가 '동맹·파트너와의 협력 확대'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은 본질적으로 '자국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우선구매법(BAA : Buy American Act)'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을 통해 자국 및 동맹국 구매를 우선시하며, 유럽 역시 역내 중심의 구매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고려할 때, NDIS의 '협력 확대'는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비RDP 체결국에게는 시장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이나 미국 공급망에 대한 깊은 통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광범위한 동맹 협력이라는 수사와 보호주의적 조달

정책이라는 현실 사이의 내재적 긴장을 보여준다.

1.2 무역안보규제 및 국방 조달 관련 법규

미국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안보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무기수출통제법(AECA:Arms Export Control Act)', '국제무기거래규정(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 특히 ITAR은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U.S. Munitions List)에 등재된 모든 방위 물자, 서비스 및 기술 데이터의 수출, 재수출, 이전을 통제하며, 위반 시 강력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국방 조달 분야에서는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이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산 물품·자재 사용을 우선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상품에 대해 BAA 및 국제수지 프로그램의 가격 차등 적용 예외를 허용하여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방산 협력을 증진한다. 현재 28개국이 RDP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6년 RDP 체결 이후 미국과 미사일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RDP 체결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2023년 11월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여 방산물자의 신속한 조달 및 우선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구 분	주요 내용
무역안보	무기수출통제법 (AECA) : 미국 안보, 외교정책, 국제평화 증진 및 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무기 수출 통제. 제3자 이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핵 비확산 의무 위반국 판매 금지 등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 국가안보·대외정책 이익 보호를 위해 방위 물자, 방위 서비스 및 기술 데이터의 수출, 재수출, 이전 등을 통제. 미 군용 물자품목 목록(USML)에 등재된 모든 방위 물자·서비스 관련 기술 데이터 적용.
	수출관리규정 (EAR) : 이중용도 품목 등 상업용 물품·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을 통제하여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보호.
국방조달 법률/규정	미국산우선구매법 (BAA) :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산 물품·자재 사용을 우선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 국방 조달 관련 무역 장벽 완화, 방산 협력 증진, 장비의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강화, 조달 협의 체계 촉진. 적격국 상품은 BAA 및 국제수지 프로그램 가격 차등 적용 예외.
공급망	공급안보약정 (한미SOSA) : 한미 양국 간 국가안보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국방 물자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상호 공급 체계 구축. 비구속적 협정 명시, 상호 우선 조달 지원 등.
	국가기술산업기반 협의회 (NTIB) : 미국 및 주요

	동맹국(캐나다, 영국, 북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간 국방산업 역량을 통합하여, 국방 공급망 안정성 확보, 첨단기술 우위 유지 등 도
--	--

[표 4. 美 방위산업 관련 주요 규범 및 제도]

출처: 통상이슈브리프 16호

표 4는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규와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한다. 특히 AECA, ITAR, EAR과 같은 수출 통제 규제와 BAA, RDP와 같은 조달 규제가 어떻게 미국이 자국 안보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조율하는지 보여준다. SOSA와 NTIB의 포함은 미국이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2.1. EU 방위산업전략(EDIS)의 목표 및 추진 방안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EU 최초의 '유럽 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개별 회원국이 주권적 권한을 가진 국방 문제에 대해 EU 차원의 개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EDIS는 2030년까지 ▲방산물자의 EU 역내 조달 비중 확대(50%), ▲방위 장비 공동조달 비중 제고(40%), ▲EU 역내 방위 물자 교역 비중 증대(35%)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EU는 '유럽 군비 사업 구조(SEAP)'를 도입하여 복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방위 장비 개발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을 촉진하고, SEAP의 공동구매 및 공동소유 방위 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EU 공동 기구 신설, EU 공동 이익 프로젝트 추진, 표준 채택 및 상호인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역내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구 분	세부 내용
EU 공동 기구 신설	방위산업 준비태세 위원회 신설, 고위급 유럽 방위 산업 워킹그룹 신설.
EU 공동 이익 프로젝트 추진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우주, 사이버, 해상 등 프로젝트에 공동투자 단행
표준 및 상호인증	회원국 간 방위 장비 상호운용성 높이기 위해 표준 채택 및 상호인증 촉진
유럽 군비 프로그램 구조 도입	복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서 기능. 공동구매, 공동소유 방위 장비에 VAT 면제 혜택 제공. 회원국들이 방위 수출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자금 조달 위해 채권 발행 허용

[표 5. EU 방위 공동투자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

표 5은 EU의 방위산업 강화 전략인 EDIS의 핵심 추진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EU가 역내 통합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SEAP의 VAT 면제 혜택은 회원국들의 역내 조달 및 공동

개발을 유인하는 강력한 정책 도구임을 시사한다.

2.2. 역내(域內) 방위 장비 조달 확대 기초

현재 EU 방위 시장은 회원국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를 저해하고 생산 단가를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155mm 자주포 생산비는 중국의 7.4배, 러시아의 11.5배, 심지어 인건비가 더 높은 미국에 비해서도 10.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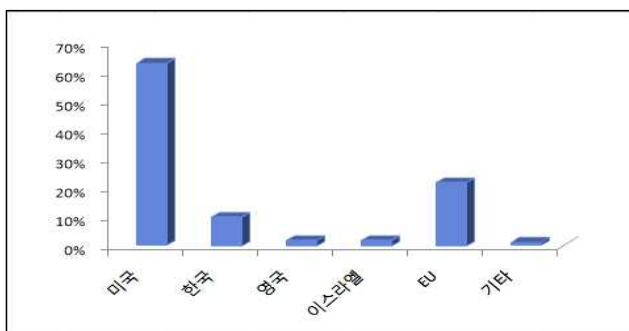
(단위: 유로)

국 가	모델	제조사	생산비
프랑스	CEASAR	Nexter	5,863,133
독일	CEASAR	KNDS	11,087,499
독일	Panzerhaubitze 2000	KNDS, 라인메탈	17,000,000
중국	PLZ-05	노린코(Norinco)	2,309,896
미국	M1092	BAE 시스템즈	1,602,871
러시아	2S19 Msta-S	Uraltransmash	1,478,333
한국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00,000

[표 6. 주요국별 155mm 자주포 생산 추정비용]

표 6은 EU 역내 방위산업의 비효율성과 높은 생산 단가를 구체적인 사례(자주포)를 통해 보여주어, EU가 왜 역내 통합 및 공동 조달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한국의 가격 경쟁력(K9 자주포)이 EU 시장에서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나, 동시에 EU의 자국 산업 보호 의지를 강조한다.

러시아 침공 이후 2023년 6월까지 EU의 방위 장비 역외 의존도는 78%에 달했으며, 이 중 미국(80%), 한국(13%), 영국(3%), 이스라엘(3%)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았다.



[그림 1. EU의 국별 방위 장비 공급 의존도 현황 (단위: %)]
출처: Jean-Pierre Maulny(2023)

그림 1은 EU가 외부, 특히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방위 장비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이 EU 역외 수입의 13%를 차지한다는 점은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EU의 역내 조달 확대 정책이 한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방위 무역을 EU 전체 방산 교역의 35%까지 확대하고, 회원국의 역내산 방위 장비 조달 비중을 최소 50%(2035년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럽 군사 판매 체계(European Military Sales Mechanism)'를 시범 운영 후 202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기존 문제점	해결방안
공동 카탈로그 제작	EU 역내 생산능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역외산 장비 구매로 이어짐	방위 장비 인지도 제고를 위해 EU 집행위 차원의 공동 카탈로그 제작
상시 공급 체계 구축	공급을 위해 한정된 수량만 생산하여 생산단가가 높고 재고 확보에 어려움	공동조달 재정 지원을 통해 역내 생산자들의 상시 공급을 위한 재고 비축 유도
조달절차 간소화	법적으로 EU 회원국은 他 회원국에게 국방 조달계약 내용을 공개 가능하나 활용 저조	EU 역내 제조업체와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는 표준 계약 체계 도입, 회원국들의 동의 하에 국방조달 계약 내용을 他 회원국에게 공개

[표 7. 유럽 군사 판매 체계 주요 내용]

표 7은 EU가 역내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공동 카탈로그 제작, 상시 공급 체계 구축, 조달 절차 간소화 등은 역내 기업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한국 등 역외국 기업들이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2025년 3월 발표된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은 방위 예산 확대를 위해 EU 재정준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허용하고, '유럽 안보 및 행동(SAFE)'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공동 조달 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특히 SAFE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공동조달에 참여하는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의 생산 시설이 EU 회원국, EFTA 회원국,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의 원가가 최종 제품 원가의 6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U의 역내 조달 확대 정책은 한국 방산 수출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친다. SAFE 프로그램의 엄격한 현지 부품 및 생산 시설 요건은 한국의 완제품 직접 수출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EU 방위산업전략(EDIS) 백서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언급하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간접적인 참여 또는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완제품 수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EU 내 현지 생산 시설 구축, EU 기업과의 합작 투자, 또는 기술 이전 협약을 통해 EU의 역내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직접 판매에서 더 깊은 산업 통합으로 시장 접근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2.3 역외(域外) 국가의 협력 가능성 및 제약

EU의 방위산업전략(EDIS)은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파트너 및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후 발표된 방위산업 백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언급은 한국의 방위 역량과 신뢰성에 대한 EU의 지형학적 인식을 반영하며, 고위급 대화나 공동 연구개발(R&D) 이니셔티브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인정이 곧바로 완제품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U의 강력한 역내 보호주의 정책, 특히 SAFE 프로그램의 65% 현지 콘텐츠 규정은 여전히 한국의 對EU 방산 수출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수출 중심의 판매를 넘어, EU 내 생산 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술 공동 개발, 그리고 합작 투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EU의 역내 생산 요구 사항을 우회하고, '파트너' 지위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방위산업 정책 동향 분석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EU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동, 아시아, 호주, 캐나다, 남미 지역의 정책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 지역들은 국방비 증액, 자국 우선주의(Defense Industrial Localization) 정책 강화, 기술 이전 및 산업 협력 요구 확대 등의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중동 및 아시아는 안보 위협 고조로 인한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이 활발하며, 호주와 캐나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 및 공동 개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미는 재정적 제약 속에서도 노후 장비 현대화 및 치안 강화를 위한 수요가 꾸준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 지역의 국방 예산, 소요 무기 체계, 라이선스 생산 의무화, 현지 투자 유치 정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출 및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IV. 한국 방위산업 현황 및 당면 과제

1.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및 주요 수출 품목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2.2%의 점유율로 10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폴란드, 필리핀, 인도 등이다. 2023년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의 매출은 폴란드, 호주, 영국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19년부터 2023년 누적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위 수출국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 전투기, 탄약, 함정 등 완성품 위주이다. 2024년에는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순위	국가명	세계 시장 점유율	상대수입국 1순위	상대수입국 2순위	상대수입국 3순위
1	미국	43	사우디	우크라이나	일본
2	프랑스	9.6	인도	카타르	그리스
3	러시아	7.8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4	중국	5.9	파키스탄	세르비아	태국

5	독일	5.6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스라엘
6	이탈리아	4.8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7	영국	3.6	카타르	미국	우크라이나
8	이스라엘	3.1	인도	미국	필리핀
9	스페인	3.0	사우디	호주	튀르키예
10	한국	2.2	폴란드	필리핀	인도

[표 8. 글로벌 무기 수출 상위 국가(2020-2024) (단위: %)]
출처: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표 8는 한국의 글로벌 무기 시장 내 위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며, 주요 경쟁국 및 수출입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이 10위에 위치하고 주요 수입국이 폴란드, 필리핀, 인도라는 점은 한국 방산 수출의 지역적 다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동시에 보여준다.

2.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 및 성장 잠재력

한국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NATO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 보유, 실전 검증 장비,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 역량을 강점으로 확보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국내 산업 동반 성장, 국방예산 절감 및 군 전투력 향상, 국제 위상 제고, 핵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창출한다. 실제로 2022년 방산 수출은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글로벌 방산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분담된 협력형 분업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군과 정부가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소수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는 쌍방 독점 형태를 띠고 있다. 국방 과학연구소가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방위사업청이 무기 획득, 조달, 수출을 총괄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수출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이러한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글로벌 방위 시장이 첨단 기술 통합과 현지 생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성비' 강점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적 우위로 보아야 한다. 다음 전략적 목표는 포괄적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파트너십, 그리고 강력한 금융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제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을 단순한 제품 수출국에서 방위산업 개발의 전략적 파트너로 변모시키고, EU와 같은 주요 수입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국제정세 및 대외환경의 영향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방위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국제정세와 대외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적 지원이 절실하다.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시장 확장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통해 자국 및 동맹국 구매를 우선시하며, 유럽 역시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역내 중심의 구매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등의 영역으로 방위산업 확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무기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방위산업이 본질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국제 방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는 것은 분산된 정책 지원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방산 수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연계, 통상 중심의 체계적이고 유연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DSCA)과 같은 통합 관리 체계나 프랑스, 이스라엘의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와 대비된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개별적인 성공이 시스템적인 시장 침투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며, 주요 방위 수입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취약하게 만든다.

V. 한국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통합 컨트롤타워 및 전문 지원체계 구축

한국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연계, 통상 중심의 체계적이고 유연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산된 지원 체계는 단순한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넘어, 국가 방위 수출 전략의 일관성과 민첩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방위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이 일반화된 분야이므로, 통합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한국이 정치, 외교, 기술, 금융 등 다양한 국가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을 초래하며, 고부가가치 장기 계약에 필수적인 장기적 신뢰 관계 구축 능력을 약화시킨다. 미국은 대통령, 국무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방산수출 체계를 운영하며, 국방부 내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안보협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역시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수출 대상국과의 신뢰 구축 및 협력 확대

방위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이 일반화된 분야이므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과의 선제적인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대규모 수출 계약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전략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이전, 현지 생산, 금융지원 등 복합적인 협상 의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접근 방식은 초기 시장 진입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정부 간 계약이 주를 이루는 방위산업에서 장기적인 '신

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장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미국 방산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RDP 체결 시 미국산우선구매법(BAA) 면제, 국방조달규정(DFARS) 예외 적용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해지고, 공동 연구, 개발, 생산 등 방위산업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일본은 2016년 RDP 체결 이후 미국과 미사일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관세 혜택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RDP와 유사한 협정 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우방국과 수출통제 완화, 공급망·기술 협력을 위해 '국가간 기술 산업기반 협의체(NTIB)'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하다. 한미 간 체결한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을 통해 공급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 방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가치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적극적이고 관대한 기술 이전, 파트너 국가 내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 역량 지원, 그리고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 제공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화시켜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수입국의 공급망 회복탄력성 목표와 부합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기술보호 법제 강화

방위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므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사이버 보안 강화, 기술 보호 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보호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법·제도, 보안 관리, 사법 집행 체계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선고 비율이 낮고 판결의 약 85%가 집행유예 또는 무죄로 처분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와 연동된 양형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스파이법 등을 통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고한다. 미국은 기소 사건의 80% 이상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 한국은 평균 선고형이 징역 1~2년에 그치고 실형 선고율도 12%에 불과하다. 한국의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사법적 관용은 국가 안보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숨방망이 처벌'은 스파이 행위나 불법 기술 이전을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국제 파트너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경제 안보 시대에 방위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우주 등 첨단 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취약한 기술 보호 체계는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위협하며 미래 R&D 투자 및 협력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적 차원의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기술 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4. 금융지원 확대

방산물자는 고가이며 장기 계약이 일반적이므로, 수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금융 조건은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금융 지원이 미흡할 경우 수출 계약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무산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은 주요국의 장기 저금리 수출금융에 밀려 여러 차례 수주에 실패했으며,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또한 금융지원 부족으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흡한 수출금융 지원체계가 K-방산 수출 확대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금융 지원 부족은 특히 '고가·장기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 성과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국 기업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기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장기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불안정한 단기 거래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손실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종합 방위 파트너로서 한국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미래의 대규모 계약 확보 및 글로벌 방위 공급망으로의 심층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출금융 지원 규모 확대, 창구 단일화 및 원스톱 서비스 체계 마련, 전담 방산금융조직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이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첨단기술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동력에 힘입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전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자국 공급망 강화 및 동맹국과의 선별적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강력한 무역안보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유럽 방위산업전략(EDIS) 및 유럽 안보 및 행동(SAFE)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조달 및 생산을 강력히 유도하며 역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10위권의 수출국으로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수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주요국의 자국 중심 정책과 첨단 기술 전환에 대한 대응 미흡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방산 수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 지원 체계,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여 신뢰 기반 협력이 부족한 점, 미흡한 기술보호 법제, 그리고 취약한 금융지원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

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동향을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닌, 지정학적 변화와 기술 혁신이 상호 강화되는 질적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폭을 확장했다. 또한 주요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공급망, 조달, 기술보호, 금융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여, 국가별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내부적 요인(정책 분산, 금융 취약성)과 외부적 요인(주요국의 보호주의)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함으로써, 방위산업 연구의 복잡성을 제고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방위산업이 현재의 '가성비' 중심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을 포함하는 신뢰 기반의 협력 확대, 첨단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 및 사법 시스템 강화, 그리고 고가·장기 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언은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실질적인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컨트롤타워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여,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수출 전략 수립 및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확립된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협력 확대(국가 간/기업 간)와 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금융 및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개발 투자를 지속하여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로 공개된 자료와 학술 정보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각국의 비공개 정책 결정 과정이나 기업 내부의 전략적 판단 등 심층적인 정보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정 시점의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므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주요 방산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절충교역(Offset) 및 기술이전 협상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넘어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EU의 역내 생산 및 기술 자립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 등 첨단기술이 방위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이 미래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우선순위와 글로벌 기술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방산기술 수출 사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References

-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06.27.). 통상이슈브리프 16호: 주요국 방위산업 정책과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시사점.
- [2] SIPRI. (2025.04).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4.
- [3] SIPRI. (2025.03).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 2024.
- [4] SIPRI. (2024.12).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2023.
- [5]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2013.05). Remaking American Security,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and national security risks across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 [6] US DOD. (2024). Fact Sheet: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 [7] US DOD. (2023).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 [8] US DOD. (2024).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for FY2025.
- [9] US DOD. (2024).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 [10] European Commission. (2024.03.05.). A new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Achieving EU readiness through a responsive and resilient European Defence Industry.
- [11] Mejino-López, J., & Wolff, G. B. (2024.11.20.). A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in a hostile world. Policy Brief, Bruegel.
- [12] Maulny, J.-P. (2023).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the European Defence Market. Institut de Relations, Policy Paper.
- [13] European Commission. (2025.03.19.). Joint White Paper of the Commission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 [14]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2025/0122 of 19 March 2025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Article 16.7.
- [15] 대한민국 국방부. (2023.01.11.). “힘에 의한 평화 구현”-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6] Wezeman, P. D. et al. (2024.03.).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SIPRI.
- INSS. (2025). 국가안보와 전략, 제25권 1호.
- [17] 김도희. (2020.10.16.). 방위산업 수출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제169호, 국회입법조사처.
- [18] 이세훈, 차도완. (2020). 주요국 방위산업정책 발전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방안. 사회융합연구, Vol. No.5.
- [19] 류지선 외. (2024). 방산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8호.
- [20] 남연지, 장인호. (2023). 방위산업기술수출범죄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18호.
- [21] 김금률. (2024).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연구, 기술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24권 제1호.
- [22] 최지연. (2023). 미국 경제스파이법 처벌 사례 연구. 한국산업보안 연구 제13권 제1호.
- [23] 장원준 외. (2024.01.31.).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산업경제이슈 제158호, 산업연구원.
- [24] 정영천. (2024). 방산수출금융 기반 확충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2호.

<저자소개>

양 현 상(Yang Hyeon-Sang,)



2025 국방융합기술연구소, 노바엑스 대표
 2015년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졸업(공학박사)
 2006년 아주대학교 정보통신학과 졸업(공학석사)
 2016~2017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집필위원(ICT 융합분야)
 2003~2019 방위사업청 사업/계약관리 담당
 관심분야 : 무선네트워크, 정보보안, AI, 드론, 우주, 항공, 방산